

내포 원년, 3대혁신 구 체적 성과 거둔다

- 2013년 도정 시책토론회 개최
... 도정 성과 극대화 방안 모색

내포 시대가 개막하는 내년, 충남도가 3농혁신·행정혁신·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도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복지·문화 분야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각계의 도정 참여 확대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내놴다.



도는 9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와 정책특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도정 역점과제 시책토론회'를 갖고, 내년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년 시책이 부서 단위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돼 부서간 연계·협력과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3대 혁신과제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부서간 융·복합

을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 시책을 보면, '3농혁신' 성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농산물의 유통선진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충남형 살기좋은 마을 시범사업 ▲농어촌응원운동 본격 전개 등을 역점 추진한다.

또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구축한 행정혁신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업무성과 100% 달성 등 '제로(ZERO)·100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신뢰받는 공직과 최상의 민주주의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생활형 자치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 확산 등 기반구축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 제도개선 등을 추진, 주민 주권의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남·북부권간 불균형 해소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지역에너지 비전 마련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복지' 실현은 사회복지, 저출산 고령화, 장애인 복지, 보건행정, 식의약안전 등 5개 분야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3~2022년)을 수립·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오지마을 노인생활지원단 설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의 사업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진 문화관광 구현' 분야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근대 유·무형 유산과 지역축제 연계 사업 ▲충남 출신 유명인 재능 콘서트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사업 확대 ▲관광객 1억명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수출 감소에도 충남 수출은 늘었다

- 7월까지 344억6600만 달러... 지난해 보다 7억 달러 2.1% 증가

- 무역수지 145억 달러 흑자 '3위'... 하반기 해외마케팅 주력키로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에도, 충남 지역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 총 수출액은 344억6,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7억6,000만 달러에 비해 7억600만 달러(2.1%) 증가한 규모이다.

수입은 지난해 190억5,000만 달러에서 4.7% 증가한 199억3,900만 달러로 분석돼 145억2,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남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경남·북에 이어 전국 3번째이다.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보면 ▲전자용기기 가 지난해 9억3,200만달러에서 올해 25억200만 달러 168.5%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 부품은 7억8,900만달러에서 12억7,400만 달러로 61.5% ▲석유제품은 25억4,500만달러에서 32억8,500

만 달러 29% ▲자동차가 9억9,200만 달러에서 11억8,600만 달러 19.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평판디스플레이는 80억2,200만달러에서 63억1,800만 달러로 21.2% 감소하고 ▲반도체 역시 102억200만달러에서 90억7,600만 달러로 1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수출 증가율은 ▲베트남이 219.6%(8억3,200만달러 12억1,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 8.9%(134억 3,300만 달러 146억2,800만 달러) ▲미국 5.4%(24억200만 달러 25억 3,2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은 51억600만 달러에서 48억 4,000만 달러로 5.2% 감소하고 ▲일본도 24억 7,500만 달러에서 21억800만 달러로 14.9% ▲대만은 22억7,900만 달러에서 17억2,100만 달러로 24.5%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42.4%로 압도적이었으며, 홍콩과 대만도 수출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각각 14%, 5%로 집계돼 중화권에 대한 무역의존도(211억8,900만 달러, 61.4%)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7월 도내 수출액은 51억3,000만 달러로 지난달 50억300만 달러에 비해 2.5%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 50억8,900만 달러에 비해서는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도는 올해 하반기 FTA 체결 국가 및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수출 증가율이 높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집중 공약을 위해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58회 백제문화제 개최

— 한류원조 미마지와 함께 “제반 준비 차질 없이 진행 중”

제58회 백제문화제는 백제인 미마지(味摩之)의 기악무(伎樂舞) 일본 전파 1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을 부제(副題)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부여와 공주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0개, 공주시 38개, 부여군 38개, 논산시 1개 등 총 8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함께 만들어 가는 백제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주민과 관람객의 참여성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미마지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9월 29일 부여 구드래공원에서 열린 개막식과 ‘대백제 천상의 올림’을 주제로 10월 7일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는 폐막식은 ‘게스트’ 중심의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폐막식 행사는 기존 주제공연 대신 공주시민과 백제권 주민으로 구성된 수백여명의 ‘대백제인합창단’이 ‘백제의 혼’ 등을 열창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합창은 준비과정 자체가 ‘축제행사의 일부’이며, 수만명의 관람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주목된다.

백제문화제의 킬러 콘텐츠인 ‘퍼레이드교류 왕국대백제’는 이번에 부여로 확대돼 총 4회(공주: 10월 2, 3일, 부여: 10월 5, 6일) 시연되며,

기존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성된 사신 일행 이외에도 일반인의 ‘행렬단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성을 크게 강화했다. 행렬단은 전통복 등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어 색다른 추억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창작무용경연대회, 백제문화상품전국공모전, 전국백일장대회 등 경연(Contest)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축제의 참여성 강화와 함께 외연 확대 및 위상 제고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매사냥’도 4차례(공주: 10월 1, 2일, 부여: 10월 5, 6일) 실시된다.

지난해에 개최하지 못했던 ‘황산벌 전투재현’은 10월 6일 논산시 부적면 소재 계백장군유적지에서 스펙터클한 전쟁신으로 관객몰이에 나선다.

부여의 ‘백제사비천도 정도고유제’(9월 30일)와 ‘백제역사문화행렬’(10월 6일), 공주의 ‘웅진성퍼레이드’(10월 1, 3일) 등 각각의 시·군 프로그램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기대에 화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4곳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사진전, 충남시외버스에 포스터 부착 등 ‘오프라인 홍보’가 축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백제문화제 홈페이지 및 전용 블로그, 서포터즈 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사전 홍보활동도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마지 재조명에 초점을 둔 개막식의 주제공연(미마지와 통하다), 국제학술회의(고대 삼국의 춤과 음악), 웅진성퍼레이드(미마지의 부활), 백제기악공연-미마지탈춤, 백제탈그리기 등 체험프로그램, KBS역사스페셜(백제기악 미마지탈춤) 등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충남발전연구원, '로컬푸드 활성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위한 주체 간 거버넌스 강조

9월 7일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로컬푸드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미국, 이탈리아, 일본, 국내 전문가들은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공동체 보존을 위해 무엇보다 주체간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일환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각국 지자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정책사례를 통해 충남에서 현재 추진중인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지역사회 먹거리보장 연대'(CFSC) 공동창립자이자 로컬푸드시스템 전문가로 활동중인 '마크 윈'(Mark Winne, 미국)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 섭취의 격차문제(비만, 결식 등) 해결"이라고 언급하면서 "미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앞 다투어 '먹거리정책위원회'를 설립해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 농가들을 직접 연결시켜 로컬푸드 공급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 전담부서 조직, 민·관 거버넌스 구축, 관련법률 제정, 구체

적 사업 시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3P(Projects, Partnerships, policies)라는 삼박자가 로컬푸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피사 대학교 '바네사 말란드린'(Vanes Malandrin, 이탈리아) 연구원은 "2007년부터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 프로젝트'(지역내 생산과 소비, 직거래 중심), 2010년 피사 시 로컬푸드 활성화 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만든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슬로푸드 문화의 정착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네사 연구원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과 토론을 통한 먹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의식과 이들을 지속적으로 한데 모아나갈 수 있는 정치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타현립대학 '타니구치 요시미츠'(Tani guchi Yoshimitsu, 일본) 교수는 "로컬푸드 활성화 추세는 세계화 속에서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과 지역의 대응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농민들과 지역공동체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키타현에서는 지산지소, 즉 직판장, 농민장터, 학교급식, 식교육, 로컬푸드식당, 유기농축제 등 다양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활동 등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자(농민), 시민사회(소비자), 정부(공공) 등 각 주체 간 거버넌스와 균형잡힌 노력이 필요하며, 로컬푸드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보지 말고 비경제적 가치(품질, 건강, 농업의 다기능성, 문화, 환경, 지역공동체) 등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향후 충남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지역순환식품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차원의 네트워킹과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도의 거버넌스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도내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과제는 농업정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영역(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광범위한 식품산업정책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행사 좌장을 맡은 충남연 박진도 원장은 “충남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순환식품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바로 ▲사회적경제, ▲내발적 발전, ▲순환과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식”이라면서 “선진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전 세계적 식량위기는 물론 가깝게는 충남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로컬푸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충남의 먹거리 증진’을 목표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연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지역 농업의 산업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농업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충남지역 농가소득의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고 농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업6차산업화’와 ‘광역브랜드’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유학열 박사와 정현희 전임연구원 등은 8월 23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충남연 유학열 박사는 “농어업의 6차산업화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제품화, 유통, 서비스 등을 융·복합한 것을 말한



다.”면서 “1차×2차×3차산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선도적 농장형 체험농원 조성, 홍보마케팅, 다양한 직거래를 통한 유통 혁신,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성공사례를 들며 “이를 위해 농어업6차산업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지원조직 설치, 다양한 6차산업화 영역 발굴 등의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충발연 정현희 전임연구원은 “소비자는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보다 브랜드 지향적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으뜸Q마크는 1996년 시작 이후 현재 271건이 등록되어 있으나 타 시도 광역공동상표인 ‘경기도G마크’ 및 ‘임금님표 이천’ 처럼 전담운영조직이 없어 지속적 관리·운영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지사 추천 ‘으뜸Q마크’와 각 시·군 단위 브랜드 간 상호협력체계가 미비하고, 타 시도 브랜드에 비해 홍보역량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략적 홍보 관리를 위한 운영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임연구원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으뜸Q마크’는 도지사 인증 내지는 추

천이 아닌 지역성을 내포한 ‘대표 브랜드’여야 하고, 일반 농산물 및 시·군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변화시켜야 하며, 브랜드 지원·품질검사·홍보마케팅 등을 전담해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 지방분권 실현 모색 한·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과 일본 자치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방분권·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진도 충발연 원장, 일 자치체학회 참가자,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3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세종시 출범에 즈음하여 충남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아젠다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한 한-일 간 학술교류와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홋카이도 ‘카타야마 켄야’ 니세코쵸장은 니세코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주민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해왔던 활동이나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치도구, 즉 마을의 헌법”이라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한국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국가권력의 집권화로 인해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추세”라면서 “결국 지금까지의 ‘국가주의 자치분권’을 극복하고 지방의 권력이 지역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생겨나며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는 “한국의 지방분권 추진은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지방이양 행정과 부족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실천적인 지방자치는 현실 기반의 주민 참여와 자치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린자치협의회 설치 ▲마을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 제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장치 마련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좌장으로 호세이대학 신용철 준교수, 히로시마현립대학 요시카와 토미오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박사, 세종시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 공주대 이정만 교수, 자치체학회 히로세 카츠야 기획부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특히 히로시마현립대학 ‘요시카와 토미오’ 교수는 “대부분 작은 자치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정문제, 고령화 등 자치제도 유지가 어려워 합병을 진행 중이다. 결국 핵심은 ‘지속가능성’에 있다.”라면서 “또한 현재 일본은 우체국 민영화 논란으로 갈등이 큰데, 민영화가 되면 과연 작은 마을주민까지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등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은 “세종시는 일본의 시정촌과 도도부현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곳으로서 아직 인구 10만 남짓의 단일화 구조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재정이나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험무대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그리고 향후 50만명 규모로 커지게 될 세종시로 들어오는 외부적 과제는 거버넌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지방분권은 학문적 논의와 현장의 실천으로 해결될 것이며 관련 실천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마을 조례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니세코’ 마을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충발연과 자치체학회 참가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심포지엄에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 지방분권 차원의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